

가족변화에 대응하는 포괄적 가족정책 모색*

초록

- ▶ 이 연구는 가족 현실에 부합하는 보다 포괄적이고 확장적인 가족정책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둬. 이를 위해 족 변화의 양상을 구조적 측면뿐만 아니라 개인의 경험과 인식을 중심으로 한 미시적 접근을 통해 살펴보고, 기존 정책과의 정합성을 분석함.
- ▶ 가족정책의 방향성: 변화에 대응하는 포괄적 정책 수립
- ▶ 포괄적 가족정책 정립을 위한 전략: ① 기존 사회정책 조정과 대상 확대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 ② 가족구성에 관계없이 개인의 일상 돌봄을 지원하는 정책 개발. 구체적으로 자기돌봄을 위한 다양한 관계망 지원, '다름'을 존중하는 가족/친밀한 관계 문화 조성
- ▶ 추진체계 모색: 수요자 중심의 유연한 체계 모색. 구체적으로 ① 현장 밀착적 정책 실험과 확산, ② 소통에 기반한 문제 발견-기획-실행 구조 마련, ③ 변화 수용을 위한 법률 정비

1 연구 배경 및 목적

- ▶ 이 연구는 변화하는 가족 현실에 부합하는 보다 포괄적이고 확장적인 가족정책을 모색하기 위해 가족 변화의 양상을 구조적 측면뿐만 아니라 개인의 경험과 인식을 중심으로 한 미시적 접근을 통해 살펴보고자 하였음.
- ▶ 특히, 그동안 가족정책이 충분히 주목하지 못했던 비정형적 형태로의 변화에 주목하여 새롭게 등장하는 정책 수요를 포착함. 아울러 최근의 가족 변화에는 역할공동체로서의 가족에 대한 사회적 기대와 갈등적인 인식도 포함되어 있다는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개인이 가족 또는 가족과 유사한 관계를 선택하고 구성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인식과 실천 변화를 분석하고자 하였음. 이러한 접근은 비혼과 1인가구 등 비정형 가족 구성에 특화된 방향으로 가족정책을 전환한다는 의미를 갖기보다는 개인에게 가족이 더 이상 고정된 형태로 지속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생애 전반에서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한 가족정책의 방향성을 모색해 보기 위한 것임.
- ▶ 이러한 문제 인식 하에서 이 연구는 가족 변화에 대응하는 가족정책의 방향과 그에 부합하는 체계를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둬.

* 이 이슈페이퍼는 2025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연구보고서 내용을 일부 발췌하고 정리해 제작되었습니다.

출처: 김소영·송효진·최유진·성경·김아래미·홍윤선(2025). 가족 변화 대응 가족정책의 방향성 재정립과 추진체계 모색 연구.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 가족 변화의 특징과 새로운 정책 수요 탐색

- ▶ 우리 사회 가족 변화의 특징을 살펴보고, 변화가 파생시키는 새로운 정책 수요를 탐색하였음. 이를 위해 먼저, 통계자료를 분석해 가족구성과 가족에 대한 인식 변화 등 거시적 차원의 변화 추세를 파악하였음. 또한, 통계자료로 충분히 설명하기 어려운 개인의 가족경험과 실천 양상, 그를 둘러싼 맥락 등을 파악하기 위해 비혼 여성 중심으로 구성된 수요자 참여형 워크숍과 같은 미시적 접근을 병행하였음.

1) 통계로 본 가족 변화

- ▶ (가족구성의 선택성 증가) 혼인율은 감소하고, 가족다양성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은 증가하는 추세로, 이는 가족구성이 점차 개인의 선택 영역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줌. 가구형태의 경우 1인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전체 가구 유형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비친족가구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변화는 가족 단위로 함께 사는 삶의 형태가 감소하고, 가구구성 방식이 보다 유연해지고 있음을 보여줌.
- ▶ (주관적으로 인식되는 가족 개념) 가족의 개념과 범위 역시 주관적으로 인식되고 있음. 즉, 가족을 생활을 함께 생활하거나 정서적으로 친밀한 관계라고 인식하는 경향은 확대되는 반면, 의무적으로 주어진 부양과 돌봄의 역할·책임에 대한 동의는 약화되는 추세를 보임.

2) 개인의 가족인식과 실천 변화

- ▶ 통계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이 연구에서는 가족 변화가 개인의 삶에서 어떠한 경험과 실천으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2040세대 비혼 여성 중심*으로 워크숍(총5개 그룹)을 실시하고, 개인의 가족 경험과 인식을 질적으로 분석하였음.

〈표 1〉 워크숍 참여자의 가족구성 특성

연번	연령대	현재 동거원	원가족 구성**	취업 여부	비고
사례 1	30대	공동체가족(3), 고양이(2)	부모, 언니, 오빠, 남동생(2)	취업	기숙 고등학교, 대학 진학으로 독립
사례 2	30대	1인가구	부모, 여동생	취업	어머니의 자녀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30대에 독립
사례 3	30대	어머니	부모, 여동생, 남동생	학업중	-
사례 4	30대	1인가구, 강아지	부모, 남동생	취업	-
사례 5	20대	1인가구	부모, 남동생	취업	대학 졸업 후 독립, 청년주택 거주
사례 6	20대	파트너, 고양이	부모, 언니(2)	취업	20대 초반 독립, 자취와 본가 생활을 반복하다 동성 파트너와 동거 중
사례 7	40대	1인가구	부모, 남동생	취업 (프리랜서)	대학생 시절 독립
사례 8	30대	부모, 고양이	부모, 남동생	취업	-
사례 9	30대	여동생, 고양이	부모, 여동생	취업	대학생 시절 독립
사례 10	20대	파트너, 강아지	부모, 친할머니, 여동생	취업	19살에 집에서 쫓겨남

* 참여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는 드러나지 않았으나 워크숍을 진행하면서 자기 보고에 의한 성 정체성과 지정 성별이 일치하지 않거나 이성애를 지향하지 않는 사례가 발견되어 '여성 중심'이라는 표현을 사용함.

** 원가족 구성은 참여자가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범위를 기술함.

연번	연령대	현재 동거원	원가족 구성**	취업 여부	비고
사례 11	30대	1인가구	부모, 남동생	유급노동 (주1회), 자활 병행	20대에 가정폭력으로 탈가정
사례 12	20대	파트너	부모	취업	기숙 고등학교, 대학 진학으로 독립
사례 13	30대	파트너, 고양이(2)	외조부모, 부모, 남동생, 부, 새어머니, 친조부모, 고모, 삼촌	취업준비 중	부모와 살다가 외가와 친가를 오가며 지냄. 대학 진학 후 아버지와 1년 생활 후 독립
사례 14	20대	고양이	모, 여동생(2)	취업	가족과 갈등으로 1년 전 독립
사례 15	20대	1인가구	부모	취업	취업 후 어머니와 3년 동거하다가 독립
사례 16	40대	언니	부모, 언니, 오빠	취업	대학 후 독립. 현재는 본가, 언니집, 직장인근 주거를 오가며 생활
사례 17	40대	부모	부모, 오빠	취업	-
사례 18	30대	고양이(4)	부모, 남동생	취업	취업 후 독립
사례 19	40대	언니	부모, 언니(3), 남동생	취업(프리랜서)	기숙 고등학교, 대학 진학 후 독립
사례 20	40대	파트너	할머니, 부모, 오빠(2)	취업	기숙 고등학교, 대학 진학 후 독립
사례 21	20대	부모, 오빠	부모, 오빠	취업 준비중	-
사례 22	30대	여동생	부모, 여동생	취업 준비중	동생이 복학하며 함께 독립
사례 23	30대	1인가구, 강아지	부모, 남동생	취업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집으로 독립
사례 24	30대	1인가구	친조모, 부모, 남동생	취업	청년 주택 당첨으로 독립
사례 25	30대	1인가구	친부모, 새어머니, 새아버지, 반려견	취업 (프리랜서)	대학 졸업 후 해외에서 워킹홀리데이로 쉐어하우스에서 거주, 한국에 돌아와 가족과 지내다 독립

- ▶ (가족 안에서 발생하는 심리적 어려움과 폭력) 참여자들이 기대하는 가족의 모습과 현실에서 경험하는 가족 사이에는 간극이 존재하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개인들은 심리적 부담과 어려움은 물론 폭력이나 은둔과 같은 문제에까지 직면할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함. 그들 중에는 가족을 선택하고 구성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는 경우도 존재했지만, 대체로는 사회적으로 부여된 가족역할과 관계 규범을 거부하지 못한 채 가족을 부담으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임. 한편, 위계적이고 일방적인 가족관계, 개인의 가치가 존중되지 않는 가족문화와 사회 분위기에서 참여자들은 차별과 불편, 심리적 부담을 경험하고 있었음. 그들 중 일부는 가족과의 관계를 단절하거나 거리를 두는 전략을 취하는 한편, 우울, 은둔, 폭력 경험을 보고하기도 함.
- ▶ (삶의 기본 단위를 '개인'으로 설정하는 생애 전략) 참여자들은 가족구성에 관계없이 삶의 기본 단위를 '개인'으로 정체화하고 있었음. 이는 단순히 1인가구나 비혼지향과 같은 형태적 특징을 의미하기보다는 가족구성이 불확실한 현실에서 개인의 일상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삶의 전략으로 이해할 수 있음. 그들은 고정된 형태의 가족이 존재하기보다는 개인의 전 생애에 걸쳐 가족관계를 형성·해체·재구성하며 다양한 방식으로 살아가게 된다고 인식하고 있었음. 그에 따라 가족구성 여부와 관계없이 개인의 일상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경제적·심리적 자원을 필요로 하였으며, 전 생애에 걸쳐 독립적이고 개별적인 삶을 꾸려가는 것으로 정체화하는 경향을 보임.
- ▶ ('나'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관계 구성 실천/희구) 참여자들은 단일한 가족 결속에 의존하기보다 개인의 필요와 상황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관계를 맺으며 일상을 유지함. 임시적인 돌봄 관계, 일상에서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 느슨하게 지속되는 정서적 지지 관계, 단순한 주거 공유부터 일상을 공유하는 친밀한 공동체에 이르기까지 관계의 양상은 다양하게 나타남. 가족과 같이 단일한 관계 안에서 모든

필요를 충족하기도 하지만 개인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 다수의 관계를 통해 일상을 유지하는 방식도 존재하였음. 즉, 기존에는 가족이라는 하나의 울타리 안에서 부양, 돌봄, 정서, 주거 등 모든 욕구를 해결했다면, 이제는 개인이 주체가 되어 여러 개의 다양한 관계망을 다발적으로 가동해 일상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실천 양상이 변모하는 양상이 나타남. 이는 개인화 경향이 심화되고, 가족구성이 유동적인 다양한 관계가 개인의 안정적인 일상을 유지하는 주요 자원으로 부각될 가능성을 보여줌.

3) 정책적 시사점

- ▶ 통계자료 및 워크숍 운영을 통해 분석한 결과를 종합해 도출한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 ▶ (가족구성에 관계없이 개인 단위 일상 유지 기반 확충) 개인화 경향이 뚜렷해지는 현실에서 가족구성 여부에 관계없이 개인의 일상 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자원과 조건 형성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음.
 - 가족구성이 가변적이고 불안정해지는 사회에서 개인화 경향은 안정적 일상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이 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주거와 다양한 관계 자원이 중요하게 부각되었음. 주거는 개인 단위의 삶의 필수 기반일 뿐 아니라 경제적 자원이 부족한 청년들이 주거를 공유하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일시적 또는 지속적인 관계를 형성한다는 측면에서도 가족정책에서 점차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영역임. 더불어 개인 생애 전반에 걸쳐 다양한 가족의 형성과 유지가 가변적이고 불안정한 측면을 고려할 때, 다양한 관계망을 형성·유지·해체·재구성할 수 있도록 사회적 자원을 제공하는 정책은 변화하는 가족 현실에 대응하는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음.
- ▶ (가족 개념의 제도적 확장) 주관적으로 구성되는 가족의 범위와 의미를 고려하여 가족구성의 선택을 존중하고, 기존의 가족관계와 규범을 재정립하기 위한 제도적·정책적 개선이 필요함.
 - 역할공동체로서의 가족의 의미는 약화되고, 개인의 생활의 장(場)으로서의 가족의 의미는 확대되고 있음. 그럼에도 여전히 사회적으로 주어진 가족 역할과 관계 규범이 개인 인식과 행동을 제약하고 있음. 이러한 간극이 지속될 경우 개인은 가족 안팎에서 차별이나 폭력, 심리적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변화하는 현실에 부합하도록 가족역할과 관계 규범을 재구성하고, 혈연과 혼인 중심의 협소한 가족 개념을 확장적으로 재개념화하여 제도적으로 인정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요구됨.
- ▶ (유연하고 포괄적인 정책 체계 구성) 비정형적이고 가변적인 가족 변화에 보다 적실하게 대응하는 정책 체계의 모색이 요구됨.
 - 가족의 정형성이 해체되고, 개인의 생애 전반에서 가족구성이 유동적인 현실에서 기존의 특정 가족유형 중심 정책만으로는 변화에 대응하기 어려움. 이에 따라, 보다 유연하고 포괄적인 정책 체계 구성이 요구되며, 나아가 가족정책의 수요자를 정부 지원의 수혜자가 아니라 정책 기획과 실행 과정에 참여하는 주체로 인식하는 거버넌스 구조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3 변화하는 가족의 새로운 수요와 가족정책의 정합성 분석

1) 기존 가족정책 프레임의 한계 및 정합성 진단

- ▶ 가족정책의 프레임(frame)이 가족 변화가 파생시키는 새로운 정책 수요를 대응하는 데 적합하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20년간의 추진된 제1~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분석 자료로 활용함.
- ▶ 분석 결과, 가족정책의 구조와 가족의 변화로부터 파생되는 새로운 수요를 대비해 살펴본 결과 현재의 가족 개념과 가족 단위 접근으로는 관계 중심의 가족, 개인의 일상생활 공간으로서의 가족 등 변화하는 가족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었음.
- ▶ 제1차부터 제4차에 이르는 건강가정기본계획을 분석한 결과, 지금까지의 가족정책은 협소하고 비교적 고정된 가족형태를 중심으로 지원해 왔으며, 중요한 정책의 영역인 돌봄 역시 가족원을 돌보는 가족을 지원하는데 초점을 둔 특징을 보였음. 최근에는 가족구조의 정형성이 해체되면서부터는 가족다양성 인정을 목표로 정책 방향이 조정되었으나, 이러한 변화 역시 제도 개선과 차별 해소에 국한되는 경향을 보여 역할과 기능 중심의 가족공동체 모델 정책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음.

- ▶ 이러한 구조하에서는 개인이 주관적으로 구성하고 인식하는 가족에 대한 변화, 역할공동체에서 관계 중심으로 이동하는 가족의 의미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기 어려우며, 특히, 다양한 관계 맺음과 주거 지원 등 개인의 일상 유지에 필요한 조건과 자원 형성에 충분히 대응하기 어려움. 더 나아가 가족이라는 일상의 공간 안에서 발생하는 차별과 불편, 심리적 부담과 어려움, 폭력과 은둔과 같은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대응하는 체계를 적극적으로 구성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임. 이에 가족 변화에 대응하는 가족정책은 가족의 돌봄을 지원하는 접근에서 확장하여 가족구성 여부와 관계없이 개인의 일상 돌봄과 삶의 질을 고려하는 정책적 조치를 취해야 함.

2) 가족정책 행정 및 전달체계의 구조적 문제점

- ▶ 가족정책 추진체계가 가족의 변화로부터 발생하는 복합적인 정책 수요를 수용할 만한 제도적 대응력을 갖추고 있는지 살펴본 결과, 가족정책 실행조직의 운영 역량이 제한적이어서 수요자 요구에 반응적인 정책을 생산하기 어렵고, 다영역에 걸친 가족 의제를 해소하기 위한 수평적 협력 구조 또한 미흡함.
- ▶ 행정조직 체계 측면에서 중앙정부(성평등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로 구성된 구조는 유지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 특히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가족정책을 전담하는 부서 설치와 인력 확보는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는 자율적인 정책 기획과 실행 주체라기보다는 중앙정부 사업을 집행·관리하는 역할에 머무르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또한 현재 가족정책 실행조직은 규모와 인력, 기능적 권한 등 운영 역량이 제한적이어서 수요자 요구에 반응적인 정책을 생산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중앙과 지방을 아우르는 거버넌스 운영이 제도적으로 정착된 사례도 찾기 어려움.
- ▶ 가족정책의 실행을 위해서는 돌봄, 주거, 관계 지원 등 여러 영역 간 연계가 필수적이지만, 이와 같은 다영역의 정책 요구를 조정할 수 있는 수평적 협력구조가 발달 되지 못함. 이러한 한계로, 실질적인 정책의 전달체계는 '성평등가족부-한국건강가정진흥원-가족센터'를 기본 골격으로 하며, 중앙정부와 광역·기초자치단체는 가족센터 사업과 관련된 지침, 예·결산, 감사 등 행·재정적 관리·감독 기능을 수행하는 구조로 작동하고 있음. 가족정책 전달체계의 핵심인 가족센터 역시 중앙의 표준화 된 지침과 절차에 크게 의존하는 하향식 운영 구조를 보이고 있으며, 인력과 직무 체계 또한 중앙의 표준사업 중심으로 조직화 되어 있음. 이로 인해 기존 사업 대상 범위를 넘어 새로운 수요에 대응하는 데에는 구조적인 제약이 발생함.
- ▶ 이렇게 하향식 전달 구조, 경직되고 표준화된 운영 방식으로는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가족 현실에 대응하기 어려움. 정책 현장에서는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와 연결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음에도, 이를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실행 구조가 충분히 마련되지 못한 실정임. 따라서 가족 변화에 대응하는 가족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 중심의 유연한 실행 체계를 모색해 볼 필요가 있음.

4 새로운 수요 대응을 위한 해외 정책 사례 탐색

- ▶ 가족 변화의 특징과 현행 가족정책의 구조와 체계의 정합성을 살펴본 결과, 변화하는 가족 현실에 대응하는 가족정책은 특정 가족유형에 대한 지원을 넘어, 개인의 삶의 조건과 다양한 관계 지원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음. 특히 가족이 개인의 전 생애에 걸쳐 유동적으로 구성·해체·재구성되는 관계로 변화하는 상황에서 개인이 안정적인 일상을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관계망의 형성과 유지가 주요 정책 과제로 부상하였음. 이러한 배경하에서 가족정책의 새로운 수요에 대응하는 정책 모색을 위한 참고 사례로 관련 해외 정책을 탐색하였음. 구체적으로, 개인의 고립과 관계 단절을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위험으로 인식하고, 관계 형성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접근을 보여주는 해외의 외로움(loneliness) 대응 정책에 주목함. 특히 최근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외로움이 새로운 사회적 위험으로 정책 의제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영국과 독일의 정책 사례를 대표적으로 살펴봄.
- ▶ (정책적 시사점) ① 영국과 독일의 외로움 대응 전략은 가족구조 변화와 개인화 경향에서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관계 형성에 대응하는 정책의 필요성을 보여줌. ② 외로움이라는 가족을 포함하는 사회적 관계망의 약화 등 새로운 사회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주체들의 연결과 참여를 독려하는 네트워크형 체계가 등장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가족 변화에 대응하는 가족정책이 주거, 돌봄 등 다양한 정책영역과의 연계를 통해 포괄성을 높이고, 지자체 및 정책 수요자 참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협력을 이끌어 낼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있음. ③ 외로움이라는 미시적 이슈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가 해결해야 할 위험으로 인식하고 국가 차원의 대응을 펼치는 접근 방식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음.

5 변화에 대응하는 가족정책 방향 및 추진체계 모색

● 정책 방향: 변화에 대응하는 포괄적 정책

- ▶ 가족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변화하며, 개인이 선택하고 구성하는 일상생활의 공간이자 다양한 관계맺음의 장이 되고 있음. 이러한 관점에서 가족정책은 가족유형을 특정해 지원하는 방식 외에 다양성과 동태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포괄적 정책으로 방향성을 정립해야 함. 즉, 가족구성 여부에 관계없이 삶의 기반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주거·경제·돌봄·정서적 자원 등을 개인과 가족에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족정책을 보다 확장적으로 추진되어야 함. 이러한 접근은 현 정부의 주요 국정 목표인 ‘기본이 튼튼한 사회’와도 맞닿아 있음.

● 포괄성을 높이는 투 트랙(Two-Track) 전략

① (보편적 접근) 가족구성 여부에 관계없이 삶의 기반 조건 지원

- ▶ 대상과 기준의 포괄성 제고: 가족유형을 특정해 지원하는 방식 외에 다양성과 동태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포괄적 정책으로 방향성을 정립해야 함. 가족구성 여부에 관계없이 삶의 기반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주거·경제·돌봄·정서적 자원 등을 개인과 가족에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족정책을 보다 확장적으로 추진. 이러한 접근은 현 정부의 주요 국정 목표인 ‘기본이 튼튼한 사회’와도 맞닿아 있음.

② (새로운 수요 대응) 개인의 일상 돌봄을 지지하는 정책 개발

- ▶ (정책 과제 1) 자기 돌봄(Self-Care)을 위한 다양한 사회적 관계망 지원

- 개인의 삶은 다차원적으로 구성되며, 자원이 부족한 개인·가족을 위해 정부는 주거, 일자리, 복지, 돌봄 등의 사회정책을 통해 지원하고 있음. 이번 연구를 통하여 개인의 일상에서 필요한 자원의 하나로 ‘관계’가 발견됨. 정서적 교류와 유대감, 상호 도움과 돌봄 등은 관계 맺음을 통해 충족될 수 있는 것으로, 이는 개인이 주로 가족을 통해 해결해 온 영역이나 개인의 삶에서 가족구성과 유지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현실에서 이러한 욕구를 단일한 관계 안에서 지속적으로 충족하기는 어려워지고 있음.
- 이에 가족구성 여부와 관계없이 개인들은 자신의 일상 돌봄을 위해 가족의 경계를 넘나들며 다양한 관계망을 형성, 해체, 재구성하며 살아갈 것으로 전망됨. 이 때, 관계를 형성하며 살아가는 과정에서 개인의 상황과 자원 부족, 사회적 배제 등으로 필요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사회적 고립이나 외로움과 같은 현상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관계’ 자원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함. 한편, ‘관계’ 자원은 혼자서 해결할 수 없고, 부족할 때 정부가 서비스나 현금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해결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정책적으로 새로운 접근도 요구됨.

- ▶ (정책 과제 2) ‘다름’을 존중하는 민주적 가족/친밀한 관계 문화 조성

- 가족은 사적영역이며, 단일한 이해를 가진 집단으로 간주되면서 그 안에서 일어나는 차별, 인권 침해적 행위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가정폭력과 아동학대와 같은 폭력 대응에는 제한적인 경향이 존재함. 그러나 연구 결과 전통적인 가족 역할과 경직된 규범(의무 중심의 부양·돌봄)은 개인에게 차별과 심리적 폭력, 우울, 은둔을 촉발하는 구조적 원인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함.
- 가족구성의 다양성이 증대하는 추세에서 개인들은 생애 전반에서 다양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가능성이 높아짐.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볼 때, 개인의 가치와 생활양식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가족문화 조성 정책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음. 그럼에도 이제까지 민주적인 가족문화 조성 관련 정책은 주로 가족 의례와 호칭 등 가부장적 관행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추진되어 옴. 그러나 개인들이 경험하는 가족 안에서의 차별과 심리적 폭력/어려움은 일방적인 요구와 강요, 개인생활에 대한 과도한 개입, 가족공동체의 질서 유지 등으로, 다름을 인정하고 개인의 삶의 양식과 가치를 존중하기 위한 보다 생활 밀착적인 가족/친밀한 관계 문화 조성이 요구됨.

● 추진체계: 수요자 중심의 유연한 체계 모색

- ▶ 가족 변화에 따른 새로운 정책 수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유연한 실행 단위를 고민할 필요하며, 이때, 이질적이고 지속적으로 변하는 수요에 긴밀하게 반응하는 방식이 고려되어야 함. 그러기 위해서 현장 밀착적으로 수요에 대응하는 사업 기획과 실행 단위를 신규로 설정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음. 경직적인 행정조직과 하향식 전달체계의 제약을 인정하면서 새로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 조직에서 빚겨난 유연한 조직을 구성하고, 다 주체 참여를 통해 기획과 실행에 협력하며, 조직 운영에 유연성을 부과해 주는 것이 필요함. 또한 여러 단계의 조직을 거쳐 정책을 전달하기보다 시민 등 이해관계자의 직접 참여를 통해 문제 발견부터 해결까지의 과정을 함께 만들어 가는 방식을 통해 체감도를 향상할 수도 있음.
- ▶ 수요자 중심의 유연한 정책 체계는 ① 현장 밀착적 정책 실험과 확산, ② 소통에 기반한 문제 발견-기획-실행 구조 마련, ③ 변화 수용을 위한 법률 정비를 통해 구성해 볼 수 있음.

참고자료	관계부처 합동(2006). 제1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06~2010)
	관계부처 합동(2011). 제2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11~2015)
	대한민국정부(2025). 이재명정부 123대 국정과제
	송효진·황정미·김수정·박광동·김은지·김영란·박복순·최진희·김수진·홍윤선·변혜정·조은주·김수완·배지영·김현희·이상모·장원규·홍주은·이지영·김미현·김동진·김수완·장지영(2021). 개인화 시대, 미래 가족변화에 대응하는 포용적 법제 구축 방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여성가족부(2016).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16~2020)
	여성가족부(2021).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
	조세현·우하린·김상숙(2025). 미래지향 정부혁신의 새로운 패러다임. 정부혁신 트렌드. VOL. 5
	통계청(2000, 2005, 2010). 「인구주택총조사」
	통계청(2010, 2015, 2020).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 원자료 데이터
	통계청(2015~2022). 「인구총조사」
	통계청(2020). 「인구주택총조사」 20% 표본 마이크로데이터
	통계청 보도자료(2024.11.12.). 2024년 사회조사 결과
	통계청 보도자료(2024.9.12.). 장래가구추계: 2022~2052년
	통계청 보도자료(2025.9.3.). 지난 30년간 우리나라의 혼인·출생 변화
	UK government. https://www.gov.uk/government/news/loneliness-minister-its-more-important-than-ever-to-take-action (검색일: 2025.10.2.)
	독일 연방법무부. https://www.bmbfsfj.bund.de/bmbfsfj/themen/gleichstellung/queerpolitik-und-geschlechtliche-vielfalt/gesetz-ueber-die-selbstbestimmung-in-bezug-auf-den-geschlechtseintrag-sb-gg-199332 (검색일: 2025.9.25.)
	독일 외로움 네트워크 위원회. https://kompetenznetz-einsamkeit.de/ (검색일: 2025.9.25.)

주관부처 성평등가족부 가족정책과, 가족친화서비스과

관계부처 인구전략위원회,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 지방자치단체 가족정책담당과